

#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충남의 발전전략

송 두 범  
(지역개발연구부장)

## I. 들어가는 말

우리 나라는 세계 유례없는 수도권 집중으로 수도권 과밀과 지방소외 문제가 동시에 야기되고 있으며 이는 국가의 지속적 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러한 수도권 과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40여년간 역대 정부에서 수도권 규제 및 각종 지방육성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는 역부족이었다.

수도권과밀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을 향한 전기마련을 위해서는 기존의 단편적이고 소극적 국토개편 전략을 넘어서는 획기적 국토개편전략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 노무현 후보는 신행정수도건설이라는 카드를 선거공약<sup>1)</sup>으로 제시하였다.

이후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신행정수도건설기획단과 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을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신행정수도건설을 추진중에 있다.

현재 정부에서 밝힌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일정은 보면, 준비단계(2003년말 까지)는 도시기본구상 및 입지기준 마련,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제정, 계획단계(2004~2007상반기)는 후보지평가 및 예정지선정, 개발계획 수립 및 용지매입, 건설단계(2007~2011년말)는 부지조성, 공공청사건축, 행정구역 확정 및 법적지위 부여, 이전단계(2012~)는 중앙행정기관 이전개시, 주민입주개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로드맵을 설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신행정수도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특별법<sup>2)</sup>의 국회통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신행정수도건설이 정부의 로드맵대로 추진되는 것을 전제로 충청남도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충청남도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

1) 2002년 11월 제16대 대통령 선거기간 중 노무현 후보는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청와대와 국회를 포함한 행정수도를 남한 국토의 중심인 충청권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서부터 본격적인 행정수도건설 논의가 시작되었다.

2) 현재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정부에서 제출한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안(10월 22일 제출), 한나라당에서 제출한 행정수도의충청권이전및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안(4월23일 제출)이 상정되어 있다.

그 목적이 있다.

## II. 신행정수도 도시기본구상 및 입지기준 개요

### 1. 도시기본구상

신행정수도는 21세기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미래지향적 도시로 국민통합과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정치·행정도시, 첨단기술과 전통이 조화되는 정보·문화도시,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친환경도시, 편리성과 아름다움을 갖춘 인간중심도시로의 성격과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신행정수도의 도시기능을 보면 정치·행정기능 중심의 국가중추관리기능과 이를 뒷받침하는 국제교류, 문화, 교육기능 등이다. 정부기관의 이전범위는 행정부의 경우 중앙정부 모두가 이전하며, 입법부와 사법부의 경우 이전이 바람직하지만 국회 승인 등 별도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도시의 인구규모는 1단계(2007~2020년) 30만명, 2단계(2021~2030년) 50명을 상정하고 있고, 도시개발규모는 총 7,400ha(2,300만평)이며 이중 시가지 조성면적이 5,800ha(1,800만평), 성장관리를 위한 녹지벨트면적이 1,600ha(500만평)이다. 이를 용도별로 보면 공원 및 녹지면적이 1,100만평(47.8%), 주거용지 500만평(21.8%), 국가중추시설 80만평(3.5%), 문화스포츠공간 70만평(3.0%)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충청권 도시체계 차원에서의 기능분담을 위해 도시간 기능의 특화와 분담을 유도하고<sup>3)</sup>, 도시간 물리적 연담화에 의한 난개발을 방지하며, 신행정수도 지원 및 관련기능 입지로 기존도시와의 동발 발전을 유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 2. 입지 및 평가기준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입지 및 평가기준의 작업과정을 보면 1단계는 충청권 입지의 타당성으로 신행정수도는 어느 권역에 입지하여야 하는가? 2단계는 후보지선정기준으로 신행정수도의 입지조건은 무엇인가? 3단계는 후보지 평가기준으로 가장 좋은 후보지는 어디인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1단계 충청권 입지타당성은 국토중심점 즉 인구·면적·산업중심점이 모두 충청

---

3) 신행정수도는 국가정치, 행정, 문화, 관광에 기존도시는 산업생산, 연구개발, 지방행정에 특화 및 분담

권에 입지하고 있으며, 국민여론조사 결과 충청권 입지에 57%가 찬성<sup>4)</sup>하고 있으며, 충청권 입지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61%가 응답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지역간 최소통합시간의 비교를 통해 충청권의 접근성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양호한 점을 들고 있다.

둘째, 2단계 후보지선정기준으로 합목적성, 개발가능성, 보전필요성을 들고 있다. 합목적성은 신행정수도 건설목적에 부합하는 입지선정을 위해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말한다. 개발가능성은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가능지를 확보하기 위해 지형의 물리적 특성과 토지이용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의미한다. 또한 보전필요성은 도시개발로 인한 자연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의 확보여부를 의미한다.

셋째, 3단계 최적후보지 평가기준은 신행정수도 후보지 선정과정의 과학적 객관성과 절차적 합리성 확보를 위해 평가항목 선정, 평가방법 결정, 항목별 가중치부여의 단계로 진행한다. 평가항목은 기본평가항목과 세부평가항목으로 구성되며, 기본평가항목은 수도 및 도시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조건이고 세부평가항목은 기본평가항목을 구체화한 세부항목을 의미한다. 기본평가항목과 세부평가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기본평가항목

| 구 분      | 기본평가항목       | 내 용                                     |
|----------|--------------|-----------------------------------------|
| 수도로서의 기준 | 국가균형발전효과     | 국가균형발전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가?             |
|          | 국내외에서의 접근성   | 국내외로부터 접근이 용이하여 수도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 |
| 도시로서의 기준 | 삶의 터전으로 자연조건 | 쾌적한 환경을 확보하기에 용이한 자연조건을 보유하고 있는가?       |
|          |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 도시개발로 인한 자연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가?          |
|          | 도시개발의 경제성    | 도시개발의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가?           |

자료 :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신행정수도연구단, 신행정수도도시기본구상 및 입지기준, 2003.11.

4) 2002년 12월 중앙일보 조사

<표 2> 세부평가항목

| 기본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
| 국가균형발전효과     | 지역간 균형발전효과, 서울로부터의 거리                                  |
| 국내외에서의 접근성   | 전국으로부터의 접근성, 외국으로부터의 접근성                               |
| 삶의 터전으로 자연조건 | 지형적합성, 경관, 배산임수, 양호한 자연환경                              |
|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 생태계보전, 수질영향, 대기질 영향                                    |
| 도시개발의 경제성    | 토지매입비용, 도시적 토지용도, 광역인프라구축비용, 사업추진의 용이성, 토지이용 및 관리의 효율성 |

이상에서 살펴본 기본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일반국민 2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세부평가항목의 가중치 설정을 위해서는 11월중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지역별 공청회 등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기본·세부평가항목 가중치를 확정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 Ⅱ. 신행정수도건설이 충남에 미치는 영향

신행정수도건설이 충청남도에 미치는 영향은 신행정수도가 충청권내 어디에 건설되는가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즉, 신행정수도가 1개의 광역자치단체 행정구역내에 입지하는 경우, 2개의 광역자치단체 행정구역에 걸쳐서 입지하는 경우, 3개의 광역자치단체 행정구역에 입지하는 경우 등에 따라 충청남도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는 많은 차이를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행정수도의 입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수도가 충청권 내에 입지한다는 가정 하에 충청남도에 미치는 영향<sup>5)</sup>을 긍정적·부정적으로 구분하여 개괄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 1. 긍정적 영향

#### 1) 인구유입 증대

강동희(2003)<sup>6)</sup>건설사업 개시 10년 후 총200만명, 60년 후 580만명, 권용우(2003)<sup>7)</sup>는 1

5) 대부분의 연구가 충청권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충청남도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 인지는 정확하게 산출할 수 없다. 따라서 여기서는 충청권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키고 한다.

6) 현재의 서울인구규모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행정수도를 건설하지 않았을 경우를 기준으로 한 인구규모임.

7) 권용우, “수도권 문제와 신행정수도 건설의 방안”, 신행정수도건설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심포

백만명 이상, 안정근(2003)<sup>8)</sup>은 600,000명<sup>9)</sup>, 전명진·허재완(2003)<sup>10)</sup>은 17,000명의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이 충청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2030년까지 충청권의 인구는 약48만명 증가하는 반면, 수도권 인구는 약38만명, 50,216명의 중앙행정기관공무원과 공공부문종사자가 이전하는 경우는 충청권의 인구는 156만명 증가하는 반면, 수도권인구는 122만명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표 3> 인구유입 전망

| 구 분         | 내 용                                         | 비 고                                           |
|-------------|---------------------------------------------|-----------------------------------------------|
| 강동희         | 10년후 총200만명, 60년후 580만명                     | 행정·입법·사법부, 산하기관, 공영방송국,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병행시        |
| 권용우         | 1백만명 이상                                     | 중앙행정부처, 600여개 산하기관 이전                         |
| 안정근         | 600,000명                                    | 행정·입법·사법부, 공무원 23,000명<br>신행정수도이전시            |
| 전명진·<br>허재완 | 충청권 인구 약48만명 증가(2030년까지)<br>수도권 인구 약38만명 감소 | 2010에서 2012년 완료, 중앙행정기관<br>공무원 17,000명 충청권이전시 |
|             | 충청권인구 156만명 증가(2030년까지)<br>수도권 인구 122만명 감소  | 중앙행정기관공무원, 공공부문종사자<br>50,216명 충청권 이전시         |

## 2) 고용 및 생산유발효과

전명진·허재완(2003)<sup>11)</sup>은 고용유발효과가 8만 3천개~약 27만개로 증가, 박경(2003)<sup>12)</sup>은 지역내 생산유발효과는 25조 5,000억원, 고용창출효과는 약 75만명, 이동수(2003)<sup>13)</sup>는 생산유발효과는 129조 6천억, 고용유발이 15만명, 김의준(2003)<sup>14)</sup>은 지역생산유발효과 15.2~15.8조원(중부권), 한국은행대전충남본부(2003)<sup>15)</sup>에서는 지역내 생산유발효과<sup>16)</sup>는 연간 약 2조원, 고용유발효과<sup>17)</sup>는 연간 2만 5천명에 이를 전망하고 있다.

지엄, 대한지리학회, 2003, p.93.

8) 안정근, 신행정수도 개발방향, 주택도시, 제76호, 주택도시연구원, 2003, pp.27~29.

9)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이전하는 종사자 10만 4천명(수도기능 5만 4천명, 준수도기능 3만명, 민간수반기능 2만명), 이전하는 종사자 가족 20만명, 서비스산업 종사자와 그 가족 30만명 등임.

10) 전명진·허재완,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인구 및 고용파급효과”, 신행정수도 건설의 파급효과에 관한 세미나, 국토연구원, 2003, pp.9~14.

11) 전명진·허재완, 위의 논문, pp.9~14.

12) 박 경, 신행정수도 충청권 건설과 지역발전, 대전언론문화연구원 세미나 자료, 2003.

13) 이동수, 행정수도이전에 따른 경제적 효과분석, 한국행정학회2003년 춘계학술세미나, 한국행정학회, 2003.

14) 김의준, “신행정수도건설의 지역경제 효과분석”, 신행정수도건설의 파급효과에 관한 세미나, 국토연구원, 2003, pp.33~37.

15) 한국은행대전충남본부, 행정수도 이전논의가 충청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2003.

16) 투입산출표상의 건설토목부문 생산유발계수, 건설기간(10년) 등을 감안하여 추정하면 연간 약 2조원에 달하며 이는 충청지역 GRDP의 약 3.5% 수준임

<표 4> 고용 및 생산유발효과

| 구 분         | 내 용                               | 비 고                                        |
|-------------|-----------------------------------|--------------------------------------------|
| 전명진·<br>허재완 | 충청권고용 8만 3천개 증가(2030년까지)          | 2010에서 2012년 완료,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17,000명 충청권이전시 |
|             | 충청권고용 27만개 증가(2030년까지)            | 중앙행정기관공무원, 공공부문종사자 50,216명 충청권 이전시         |
| 박 경         | 생산유발효과 25조 5,000억원<br>고용창출효과 75만명 | 신행정수도 건설투자규모 30조원, 충청권 15조원                |
| 이동수         | 생산유발효과 129조 6천억<br>고용유발효과 15만명    | 총54억원 투자                                   |
| 김의준         | 지역총생산 15.2~15.8조원(중부권)            | 2007~2011년 건설, 총사업비 37조 3,250억원 투자시        |
| 한국은행        | 생산유발효과 약20조원<br>고용유발효과 25만명       | 건설기간 10년, 건설비용 30조원                        |

### 3) 경제활동효율성 증대

한국은행대전충남본부(2003)<sup>18)</sup>에서는 관련 서비스업의 발달,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등에 따른 간접효과가 훨씬 클 것으로 추정하였다. 즉, 정부기관과 관련이 있는 단체, 연구기관 등의 이전에 따른 행정·정보 서비스 산업의 발달로 외국의 대사관, 각종 국제기관의 이전으로 서울의 국제기능이 일부 충청권에 입지함으로써 국제적 자본유치 및 정보교류에 유리하고, 중앙 행정기구와의 접촉 편의 증대로 제정, 금융, 공공사업 인허가와 관련정보 획득이 유리해 짐에 따라 일부 대기업의 본·지사가 이전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도로, 공항, 항만 등 신 행정수도가 원활히 기능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따라 생산비 인하, 생활편의 증진 등 경제활동의 효율성이 증진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 4) 지역 중추기능 강화

신행정수도의 충청권건설로 중앙행정기관 등이 이전하게 되면, 국가 중추관리기능의 분산으로 수도권 일극집중 현상을 완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이는 서울 - 중심, 지방 - 주변이라는 인식을 해소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신행정수도건설을 통한 지역중추기능 강화는 국토의 새로운 중심지로서의 역할수행이 가능하게 되고, 그 파급효과가 인접지역으로 전파되어 주변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도시화의 진전과 농업생산성의 증대 등으로 초래된 이농현상과 도시인구 유입을 방지할

17) 건설·토목사업 1조원당 고용유발인원 등을 감안하여 추정하면 연간 약 2만 5천명에 달하며 이는 충청지역 경제활동인구의 1.1%, 실업인구의 36.8% 수준임.

18) 한국은행대전충남본부, 행정수도 이전논의가 충청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2003.

수 있으며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5) 주변중소도시의 활성화

신행정수도의 충청권 건설은 주변지역에 입지한 중소도시들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행정수도 건설을 계기로 충청권 도시체계 차원에서 기능분담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즉, 신행정수도는 국가정치, 행정, 문화, 관광에 특화될 것이며, 주변도시들은 산업생산, 연구개발, 지방행정에 특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6) 지역주민의 자긍심 증대

신행정수도의 충청권건설은 서울의 범위를 확대시켜 서울~지방간의 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도민들로 하여금 종전에 볼 수 없는 강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명예향상을 도모할 수 있어 종국적으로는 애향심 고취, 그리고 귀속의식 강화를 통한 지역유대감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또 하나의 서울 탄생은 서울중심주의 주민들의 양적 증가를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질 수 있지만, 서울에 대한 희소성 상실로 서울중심주의는 오히려 완화될 것으로 판단되며, 서울인구의 신행정수도 유입에 따라 서울주민들의 양적 증가도 우려할 만한 것은 아니라고 예상된다.

## 7) 주민생활 편의 및 복지증진

신행정수도 충청권 건설은 도로, 교통, 통신 등 각종 다양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대규모 확충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지역간 인적, 물적교류의 촉진에 물론 그에 따른 비용감소를 기대할 수 있어 주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

신행정수도의 조성계획 수립단계부터 다양한 현실적 요구뿐만 아니라 장래의 수요변화를 전향적으로 수립, 반영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도시생활환경을 창출,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신행정수도에 최첨단 복지 및 후생시설, 각종 다양한 문화·예술공간 등이 대폭 확충되고 이들 시설의 지역내 적정배치와 접근성 제고를 실현함으로써 지역주민은 물론 주변지역 주민들의 편리한 이용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수준 높은 도시생활의 질 확보는 물론 주민복지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8) 교육의 양적확대 및 질적향상

신행정수도의 충청권건설은 신행정수도와 주변지역에 신규대학의 입지를 촉진시키고, 신행정수도 주변도시에 입지한 대학들에 대한 선호도로 증대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지역중고등학생들의 역외유출이 감소하고, 우수한 학생들의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충남지역의 교육여건도 양적으로 확대될 뿐 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 2. 부정적 효과

### 1) 주변지역의 불균형 발전

신행정수도의 충청권건설에 따른 파급효과로 주변 중소도시들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상당수의 주변지역 인구가 신행정수도 유입되는 역류효과<sup>19)</sup>도 동시에 나타나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 문화, 주거, 상업인프라가 비교적 양호한 대전시와 같은 대도시의 경우는 신행정수도건설에 따른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주변중소도시의 경우는 파급효과보다는 역류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역류효과의 정도는 행정수도로부터의 거리, 도시규모, SOC 등에 따라 차별화되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수도가 현재의 정부축선상에 입지하거나, 인접하여 입지할 경우 대전~청주 등과 연담화되어 대도시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도시흡인력은 증대되어 역류효과는 더욱더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역류효과는 신행정수도 인접지역 뿐만 아니라, 정부축에서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충남 내륙지역과 서해안지역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지역들의 소외현상은 더욱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 2) 충청권내 지역이기주의 확산 및 갈등심화

신행정수도의 충청권입지결정은 결국 제로섬(zero-sum)게임에 기초한 정치·행정적 과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충청권 자치단체와 주민들간의 소지역이기주의

---

19) 대전시 주변지역인 논산시, 공주시, 금산군 등의 재래시장이 쇠퇴하고, 지역상권이 대전시에 잠식당하는 현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신행정수도의 경우도 예외가 아닐 것으로 예상된다.



에 의한 갈등은 필연적일 수 밖에 없다.

물론, 국책사업인 신행정수도건설에 충청권 3개 시도가 공조하기 위해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와 대전·충청권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호남선고속전철 분기점에 대해 3개 시도간 첨예한 대립을 경험한 것과 같이 신행정수도후보지를 결정해야 할 시기에는 유명무실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신행정수도 입지결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유치경합지역인 3개 자치단체간에 공동생산적 접근방식을 통한 positive sum의 합의도출이 필수적으로 이를 위해서는 유치탈락지역에 대한 기대수준에 상응하는 물질적, 심리적 보상이 수반되지 않으면 사회적 통합이 불가능하여 향후 지방행정의 큰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

### 3) 건설지연에 따른 주민반발

충청권내 신행정수도건설이 추진된다 하더라도 행·재정적인 제약으로 이전계획에 따른 체계적이고 효율적 개발이 되지 못할 경우에는 도민들의 반발과 갈등이 야기되어 신행정수도건설계획에 큰 차질을 초래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특히,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투자재원확보가 어렵거나 재원조달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장기화되는 경우 주민들의 불만이 증대되고 행정공백으로 인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신행정수도가 입지함으로써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되는 경우 적정보상을 둘러싼 민원발생이 우려되고 특히, 이주대책이나 생활터전 확보, 전산을 잃게되는 경우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면 민원발생이 빈번하여 이전계획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

### 4) 주변 대도시 문제의 악화

신행정수도가 대전과 같은 광역대도시 인근에 입지할 경우 신행정수도와 대도시가 연담화되어 거대한 블랙홀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현재의 수도권과 같이 신행정수도 뿐만 아니라 대도시로의 인구유입도 가속화되어 대도시가 더욱더 비대화되고 이는 대도시의 생활환경 악화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현재도 도시의 외연적 확산으로 여러 가지 도시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행정수도 건설로 인한 외부인구의 유입은 대도시의 생활환경을 더욱더 열악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 5) 부동산가격의 비정상적 상승 및 시장경제 위축

신행정수도건설은 신행정수도 후보지 뿐 아니라 주변지역에 대한 부동산 가격의 비정상적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 가격의 비정상적 상승은 계층간의 소득격차, 도시저소득층의 생활환경 저하, 신행정수도 건설비용 증대 등을 초래할 수 있다. 반면, 부동산가격은 필연적으로 이에 대한 비정상적인 규제에 이어져 부동산 거래위축에 따른 세수감소, 건설경기 하락 등 시장경제를 위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Ⅲ. 신행정수도건설과 충남의 발전전략

#### 1. 신행정수도 중심의 지역공간구조 형성

기존의 제4차국토계획 및 제3차도종합계획은 신행정수도건설 공약발표 이전에 확정된 계획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을 고려하지 않고 수립한 계획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국토 및 지역공간구도를 상정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국토 균형발전보다는 수도권 과밀 및 집중을 분산하고, 정비하는 차원에서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 하에서는 지역균형발전정책도 수도권 집중의 분산 및 정비를 해소하는 소극적인 차원을 정책이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신행정수도로 거명되고 있는 충청권을 또 하나의 국토핵심공간으로 상정하고 타 지역과 효율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국토균형발전을 지향하는 공간구조로 개편하는 방향으로 제4차 국토종합계획 및 도3차계획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통합국토축은 서울을 중심으로 하여 계획하였기 때문에, 행정수도 이전예정지는 국토중심축에서 벗어나 있다. 따라서 행정수도 이전에정지를 중심으로 두 개의 축을 추가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강릉~행정수도~광주를 연결하는 강원·호남연결축을 설정하여, 수도권기능 이전 및 산악·다도해 연계관광을 활성화하고, 서산~행정수도~안동~영덕을 연결하는 신행정수도 내륙축을 설정하여, 수도권기능 이전 및 신산업지대 조성 및 관광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지역균형개발의 거점형성, 지역의 세계화 전진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10개의 광역권을 설정하고 있으나, 수도권에 대응하는 지방시혜적인 차원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10개의 광역권으로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10개 광역권외에 현재의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도 광역권으로 지정하고, 신행정수도가 입지하는 권역은 수도권특별지역(Korean Capital Territory)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 2. 사회간접자본 확충

충남지역은 국토의 중앙이라는 유리한 지리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사회간접자본시설이 미흡한 편이며 특히 항만, 공항 등 일부 시설의 경우 극히 열악하여 물류비 등 원가부담 증대를 통해 지역소재 기업의 수익성과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도로의 경우 총 도로연장의 타지역에 비해 짧지만, 도로밀도(도로망 확충정도)는 타도와 비슷한 수준이며, 1인당 도로연장은 타지역을 능가하고 있어 지역내 도로망 활용가능성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총 철도연장 및 단위 면적당 철도연장은 타도를 능가하고 있고, 복선화율도 전국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등 철도수송의 효율성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항만의 경우 지역경제규모나 선박규모에 비해 다소 미흡한 편이지만, 항만활용정도는 여타지역에 비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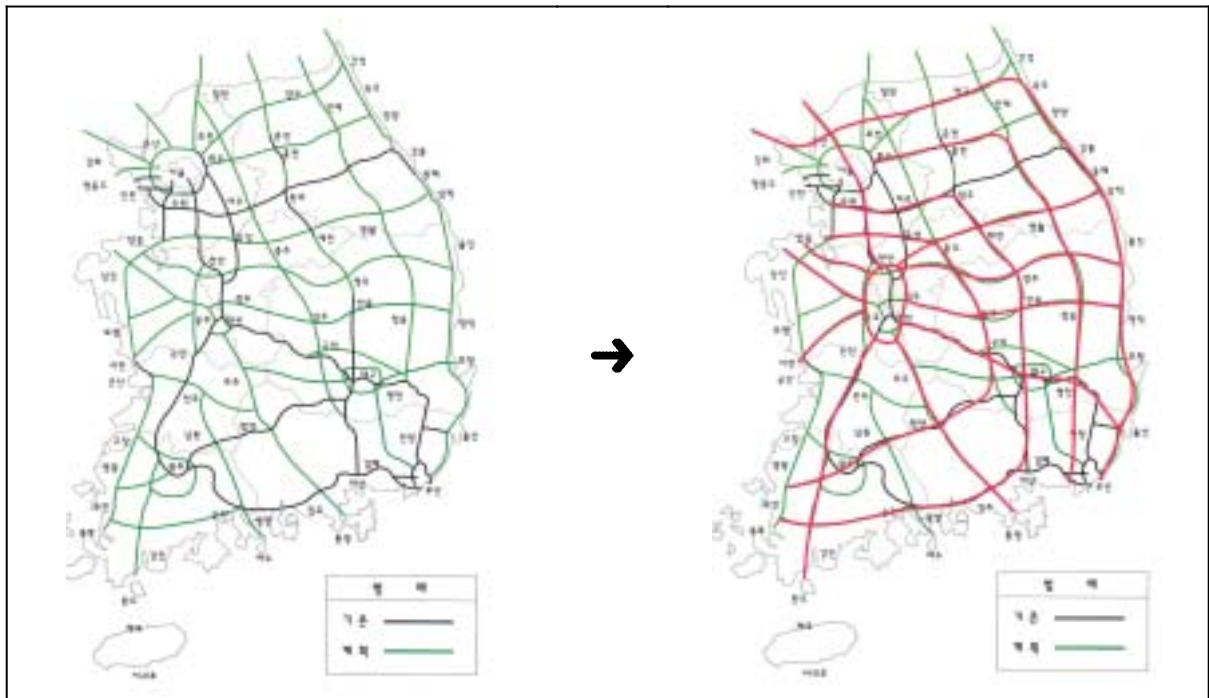
민항기가 취항하는 공항은 전무한 실정으로 인근에 청주공항이 소재하나 충남서부지역에 이용할 만한 공항시설이 없어 무역거래 확대 및 국제화 추진에 있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산업단지 조성면적 및 생산액 등에서 타지역수준을 크게 하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규모·저부가가치 구조이며, 특히 산업단지내 업체당 전용면적이 타지역에 비해 많은 반면 가동업체 및 종업원수는 적은 편이어서 지역경제와의 연관정도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 전력, 상수도는 전반적으로 전국평균 수준을 하회하고 있으며, 댐(Dam)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나 행정수도 조성에 따른 인구유입 및 산업시설 확충, 홍수 및 가뭄 등에 대비하여 수자원 확보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수도 이전에 앞서 이에 걸맞는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국토간선도로망의 경우 남북 7개축, 동서 9개축의 격자형 국토간선도로망 구축을 상정하고 있으나, 현재의 7×9 고속간선망도는 신행정수도를 순환하는 간선교통망 구축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신행정수도에 대한 접근성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첫째, 고속간선망 체계를 신행정수도를 중심으로 방사환상형 광역교통체계로 재편한다. 기존 7×9체계를 4×5개의 환상간선, 8~9개의 방사간선체계로 조정하여 전국 어디에서나 2시간 이내에 신행정수도에 도달가능토록 유도한다. 제1환상은 대전시+행정수도+천안시+청주시를 동일순환망으로 연결하는 직경 약60km의 순환고속도로를 신설한다.



[그림 1] 간선망체계 변경계획

둘째, 신행정수도와 연결되는 고속간선망의 건설시기를 행정수도 건설시기에 맞추어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충청권의 도로와 철도는 대부분 2020까지 계획하고 있으나, 이를 2010년까지 조기 건설하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5> 도로 및 철도 조정계획

| 구분 | 노 선                | 연장(km) | 기존 투자계획   | 조정 방안     |
|----|--------------------|--------|-----------|-----------|
| 도로 | ① 보령~공주 고속도로       | 45     | 2011~2020 | 2004~2010 |
|    | ② 당진~울진 고속도로       | 289    | 2011~2019 | 2004~2010 |
|    | ③ 서천~논산 고속도로       | 58     | 未定        | 2004~2010 |
|    | ④ 보령~안면도 연육교       | 13.4   | 2005~2009 | 2005~2008 |
| 철도 | ① 충청선(보령~조치원)      | 89     | 2011~2020 | 2004~2010 |
|    | ② 동서산업(안흥~천안)      | 98.4   | 2011~2020 | 2005~2010 |
|    | ③ 서해선(야목~안중~당진~예산) | 75.5   | 2019이후    | 2005~2010 |
|    | ④ 금강선(서천~논산)       | 52     | 2011~2020 | 2005~2010 |

셋째, 신행정수도의 접근성 향상 및 물류수송을 위한 새로운 교통망을 행정수도 건설시기에 맞추어 신설 및 확충한다. 우선, 대전~행정수도~청주(공항) 연결하는 경전철을 신설하여, 신행정수도와 인근 대도시 및 공항과의 연계성을 강화(연장 70km)한다. 다음으로 「대전+행정수도+천안+청주」를 씨클로 연결하는 직경 약 60km의 순환고속도로를 신설(연

장 약 190km)한다.

넷째, 서해안 각 항만이 지역항의 기능에서 벗어나 신수도와 내륙을 연결하는 대중국 교역창구로서의 기능을 강화한다. 우선 신행정수도와 대전·청주 대도시권의 대폭적인 인구유입 및 물류증가로 인한 아산항(충남 항만)의 역할 증대에 부응하기 위해 당진항을 기존 계획 28선석에서 40선석 규모로 확충하는 것을 검토한다. 다음으로 권역항만인 장항신항(32선석)과 대산항(12선석)의 시설을 조기에 확충하고, 2010까지 완공한다. 또한, 지역항만인 보령신항(11선석)을 국제적 중부권 거점항만으로 육성하고 조기에 사업을 완료한다.

다섯째, 접근성이 불량한 인천공항에서 접근성이 양호한 청주공항으로 거점공항을 이전한다. 첨단산업 등 고부가가치 상품의 항공수송이 크게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종도에 위치한 인천국제공항은 지방도시 및 수도권 남부지역에서의 접근성이 매우 불리하여 물류비의 증대를 가져오고 있음으로, 한반도 항공물류거점공항을 영종도에서 중부권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한반도 항공물류거점공항을 인천국제공항으로부터 중부권공항(청주공항 등)으로 이전하여, 항공물류 수송에의 전국적인 접근성을 대폭 높이고 지방 첨단산업의 육성을 도모한다.

한편, “수자원장기종합계획(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금강 권역은 2006년까지 30년 1회 가뭄에 대비한 물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2011년부터는 1억m<sup>3</sup>이상의 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신행정수도건설을 반영하지 않고 수립하였기 때문에 행정수도가 건설되면 불부족현상은 더욱더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인구 50~100만명 규모의 행정수도 건설을 위해서는 해수담수화, 친환경중소규모 다목적댐 개발, 해수담수화, 댐연계운영, 기존댐재개발, 지하수 개발, 지하담과 우수·하수의 재이용 등 다양한 정책과 광역상수도의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하다.

신행정수도가 건설될 충청권에는 중부권ICD(연기군 동면)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착공하지 못하고 있어 중부권 물류비용 상승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중부권 ICD를 조기준공하여 신행정수도의 물류기지로서의 역할을 담당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위해서는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획득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정부도 자체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적극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행정수도의 충청지역 이전은 충남지역의 낙후성을 타개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대전·충남지역의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사회간접자

본 확충에 소요되는 대규모 재원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중앙정부의 획기적인 지원이 필수적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방정부도 자체적으로 지방채 추가발행 등의 재원확보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간 연계성의 강화가 필요하다. 여타지역에 비해 낙후된 항만에 대해서는 시설확충을 서두르는 한편 인근산업단지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연결도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시설이 전혀 없는 공항<sup>20)</sup>에 대해서는 인근 공항으로의 접근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청주공항이나 인천공항에 대한 연결도로를 보완하는 등 사회간접자본시설간 연계체제 구축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3. 서해안 개발거점 육성 및 광역도시권 형성

충청남도 도시의 특징은 거점도시가 편재되어 있고 도시체계가 미달해있다는 점이다. 충남의 수부도시인 천안시가 도의 동북단에 치우쳐있어 충청남도 전역의 발전을 효과적으로 선도하는 개발거점으로서의 역할이 미흡하다.<sup>21)</sup>

반면, 서해안지역과 중부내륙지역은 몇몇 시·군중심지를 중심으로 배후지가 분할되어 있는 도시체계를 이루고 있어 외부충격에 약하다. 이는 대부분의 시·군중심지들이 배후농어촌에 대한 서비스중심지 기능을 수행해 왔으나, 농어업의 상대적 쇠퇴와 농어촌인구감소에 따른 구매력 감퇴에 의해 주요기능인 상업·서비스업 기능이 영세화·사양화되며, 제조업 등 도시발전의 기반이 되는 산업부문의 성장을 거의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충청남도 외부의 중·대도시의 영향력 확대로 도내 시·군생활권의 자족적 기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천안·아산·당진·서산은 수도권, 공주·논산·금산·연기는 대전광역시, 조치원은 청주시, 서천은 군산시의 영향권에 속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고차 상업·서비스 기능일수록 수도권과 대전광역시, 천안시의 영향권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교통체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접근성이 과거에 비해 비약적으로 향상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중대도시 지향성 강화에 의해 더욱 촉진되고 있다. 더구나 최근 들어 중대도시에 대형할인점의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시·군중심지들의 배후상권이 현저하게 위축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행정수도의 충청권 건설은 도시권의 광역화를 촉진하고, 신행정수도를 중심으로 한 광역교통망 체계 구축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충남의 중소도시들의 자생력은 점점 더 약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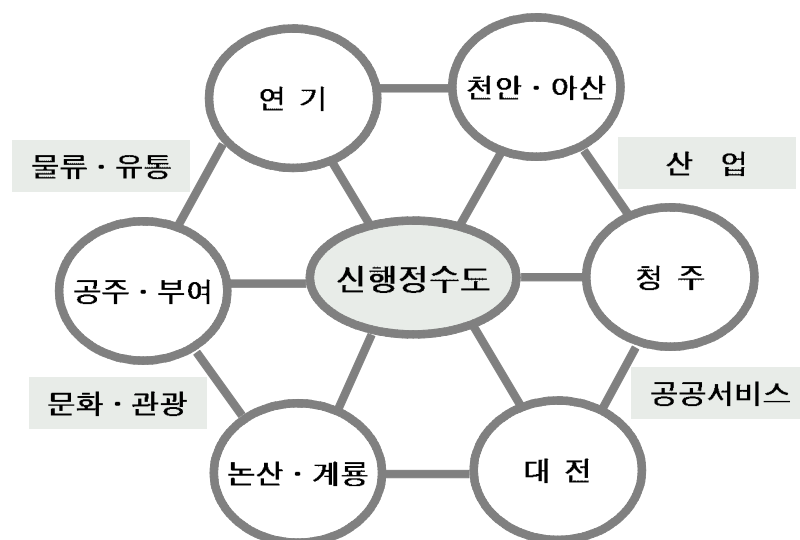
20) 충남북부권에서 발생한 물류처리와 대 중국교류를 위해서 청주공항을 허브공항으로 하되, 서산공항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1) 충청남도, 제3차 충청남도종합계획(2000~2020), 2000, pp.76~78.

따라서 기존의 정부축과 서해안과 내륙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서해안의 개발거점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해안 개발거점의 육성은 환황해 경제권이 세계의 주요 경제단위로 부상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교역이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환황해 경제권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선택으로 판단된다.

한편, 신행정수도의 충청권건설은 기존의 수도권과 함께 중부권을 국토의 핵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이다. 이렇게 될 경우 신행정수도와 대전, 청주, 천안을 중심으로 한 광역도시권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충청남도 차원에서 신행정수도를 중심으로 인접도시간 네트워크형 광역도시권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즉, 신행정수도는 우리 나라 정치행정의 중심도시, 천안·아산·연기·공주·논산 등은 적정규모의 전문화된 도시 등으로 도시별기능분담 및 상호보완적이고 유기적 협력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광역도시권 전체에 대한 체계적 성장관리를 통해 난개발 제어 및 통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그림 2] 네트워크형 광역도시권 형성

<표 6> 도시별 역할분담방안

| 구 분     | 기 능                                                       |
|---------|-----------------------------------------------------------|
| 신 행정수도  | 쾌적하고 편리한 생태·정보도시를 근간으로 청사/외교관가/교육·문화·의료·생활편익 기능이 완비된 자족도시 |
| 천안 · 아산 | 전자/정보기기 관련 대기업본사·수도권대학이전 수도권에서 이전되는 생산기능 수용               |
| 논산 · 계룡 | 국방관련 연구기관, 군수관련산업 집적화                                     |
| 공주 · 부여 | 신개념의 역사문화 관광지 및 문화산업 특화                                   |
| 연 기     | 신행정수도와 인접도시간 물류유통기능 분담                                    |

#### 4. 지역대학경쟁력 강화 및 교육혁신체제 구축

2002년 현재 충청남도에는 4년제 대학교 20개교, 교육대학 1개, 전문대학 10개교 등 총 31개의 대학이 소재하고 있으며, 155,867명의 대학생이 재학중이다. 충청남도의 대학은 천안·아산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분포하고 있는데 이들 대학은 수도권에 인접하고 있어서, 신입생들의 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대학은 충청남도에 입지하고 있지만, 이곳에 재학중인 학생들의 상당수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충청남도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행정수도의 충청권건설은 충청남도 소재 대학들에 대한 입학수요의 증대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곧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sup>22)</sup>

이와 같이 비교적 희망적인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충남소재 대학들을 지역 R&D의 핵심주체로 육성하고 지역산업과 밀착된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역혁신체제(RIS)의 중심축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거점 대학을 중심으로 한 대학간 통합을 통한 대학경쟁력 강화노력도 교육혁신체제 구축을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sup>23)</sup>

#### 5. 낙후지역 개발 및 문화관광기능의 강화

신행정수도가 충청권내 어디에 입지하는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재 낙후지역들은 표고가 높고, 경사도가 큰 자연적 요인 때문에 토지조건의 열악성과 토지이용의 가능성이 제한되어 있으며,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충남내륙 및 서해안지역들이다.

이러한 지역은 신행정수도가 입지하는데도 불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신행정수도 입지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지역들이다.

또한 이들 지역은 신행정수도의 충청권 건설이 실현되었다 하더라도 신행정수도와 지리적인 거리가 가까워졌다는 사실 이외에는 여전히 낙후지역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큰 지역이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22) 중앙일보사의 대학평가에 의한 20대 주요 명문대학을 기준으로 한 대학중추기능의 경우 최근 10년 상이 충청권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으며, 신행정수도 충청권 건설은 충청권의 영향력을 더욱더 강화할 것으로 판단된다.

23) 이러한 예로 공주대학교는 공주문화대학, 예산농업전문대학 등과 통합하였고, 최근 천안소재 천안공업대학과의 통합논의도 거론되고 있다.



이와 같은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한 정부시책으로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 폐광지역진흥지구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등이 추진 중에 있으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낙후지역들은 불리한 지형조건이나 농업환경에도 불구하고 국토와 환경보전, 수장원의 함양, 풍부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 제공, 국민의 거주·휴양환경의 제공 등 다면적·광역적·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의 특성의 살린 그린투어리즘(green tourism), 도시-농촌교류, 한계농지이용 등과 관련한 다양한 시책의 개발을 통한 지역특성에 기초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충청남도는 과거 백제의 왕도인 부여와 공주를 중심으로 한 역사문화자원과 태안해안국립공원, 섬 등 해양자연 관광자원이 풍부한 지역이다. 서해안고속도로 개통과 더불어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그 기반이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나 신행정수도의 충청권 건설에 따라 공공기관을 찾는 외국인들의 방문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충남지역의 관광인프라구축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공주·부여를 중심으로 한 역사문화 관광자원, 서해안을 중심으로 한 자연관광자원 등을 연계하는 문화관광기능의 강화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 6. 충청권 공동발전방안 모색

신행정수도의 충청권 건설은 충남·북과 대전의 적극적 협력 및 제휴가 전제되지 않으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현재 충청권행정협의회 등이 구성되어 있으나, 실질적 연계 및 협력이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에 신행정수도가 특정지역에 건설될 경우 이를 둘러싼 다양한 갈등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신행정수도를 유치하기 위한 자치단체간 입지갈등은 수도권이나 영호남권의 신행정수도 건설필요성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신행정수도건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충청권 지역의 개별적인 대응보다는 공통적인 이해기반을 보유한 충청권 자치단체들이 상호협력 및 보완체계를 형성하는 등 공동발전을 위한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2000)에서는 산업, 교통, 관광부문에서 광역적 차원의 공동발전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sup>24)</sup> 즉, 지역간 기능보완 및 협력네트워크 형성, 지역자원의 공동이용 및 관리체계 구축, 지역현안문제에 협력적 대응체계 구축 등이 그것이다.

---

24)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 앞의책, 2000.

각 부문별 실천방안으로는 우선 산업부문에서는 충청권 지역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기술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전략산업육성, 기술창업 활성화 및 산업네트워크 구축, 교통부문에서는 신행정수도를 포함하여 충청권이 전국적 차원에서 교통중심지 기능을 강화하고 권역내 효율적인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충청권내 간선교통망 구축과 중심-주변지역간 연계강화, 대도시권 광역교통체계의 정비와 확충, 광역물류체계의 구축과 국제 직교류 기반 강화, 관광부문에서는 지역고유 잠재력을 활용한 국제수준의 관광거점 조성, 관광거점간 연계체계 구축을 통한 관광자원의 활용극대화, 충청권내 관광산업 고도화와 소프트 경쟁력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충청권지역의 공동발전을 위해서는 신행정수도의 입지결정 단계에서부터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충청권을 공동의 특성과 기능적 연계성을 지닌 하나의 공간단위로 간주하고 광역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현재 대전·충남, 충북으로 이원화되어 활동하고 있는 민간영역에서의 통합노력이 절실하다.<sup>25)</sup>

## IV. 맺음말

최근 신행정수 건설과 관련하여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안”을 정부안으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됨에 따라 한나라당에서 제출한 “행정수도의충청권이전및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안”과 더불어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또한, 신행정수도의 기본구상 및 입지기준에 대한 연구결과도 상당부분 진척되어 공청회 등을 거쳐 연말이면 최종안이 그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신행정수도건설 계획은 정부의 로드맵대로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도 충청권이외 지역에서는 무관심하거나 적극적으로 이를 저지하는 움직임<sup>26)</sup>도 발생하고 있다. 반면, 상당수의 학자들과 전문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3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3대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

25) 예를 들면, 대전·충남북 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대전·충청권 행정협의회’에서는 행정수도 충청권 건설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경주하기로 공동선언하고 있으나, 정작, 시민단체의 경우 대전·충남은 행정수도이전 범국민연대, 충북은 신행정수도건설범도민협의회 등 2개로 분리되어 활동중이어서 통합이 필요하다.

26) 서울시는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정책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부 전담조직인 ‘수도발전기획단’과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도발전 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다고 31일 밝혔다. 자문위원회는 최상철·김형국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남영우 고려대 지리교육학과 교수, 송복 연세대 교수, 김정호 자유기업원장 직무대행 등 도시계획, 경제, 통일, 문화, 사회분야 등 각계 전문가 20여명으로 구성됐다. 자문위원들은 수도발전기획단과 함께 정부의 신행정수도 정책에 대한 평가 및 논리 개발을 비롯해 행정수도 이전이 사회, 경제 등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연구, 자문할 예정이다(중앙일보, 2003.10.31).

본 연구도 이러한 움직임의 일환으로 신행정수도의 충청권 건설이 충청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에 대한 충청남도의 발전전략은 무엇인지를 검토해 보았다.

지금까지 분석한 결과를 보면 우선, 신행정수도의 충청권 건설은 인구유입증대, 일자리 창출, 생산유발효과 증대, 경제활동효율성 증대 등과 같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중추기능 강화, 주변도시들의 기능변화, 주변지역의 불균형발전 등 지역공간구조의 개편, 지역주민의 자긍심 증대, 주민생활 편의 및 복지증진, 교육의 양정확대 및 질적성장, 지역이기주의 확산 및 갈등심화, 건설지연에 따른 주민반발 등 사회심리적인 영향과 같은 긍정적, 부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신행정수도 충청권 건설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충남의 대응전략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충청권을 또 하나의 국토핵심공간으로 상정하고 타 지역과 효율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국토균형발전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공간구조를 개편하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 및 도3차계획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고속간선망 체계를 신행정수도를 중심으로 방사환상형 광역교통체계로 재편하고, 신행정수도와 연결되는 고속간선망의 건설시기를 행정수도 건설시기에 맞추어 재조정, 신행정수도의 접근성 향상 및 물류수송을 위한 새로운 교통망을 행정수도 건설시기에 맞추어 신설 및 확충, 서해안 각 항만이 지역항의 기능에서 벗어나 신수도와 내륙을 연결하는 대중국 교역창구로서의 기능을 강화, 접근성이 불량한 인천공항에서 접근성이 양호한 청주공항으로 거점공항의 이전 등의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한다.

셋째, 기존의 경부축과 서해안과 내륙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서해안의 개발거점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신행정수도와 인접도시간 네트워크형 광역도시권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광역도시권 전체에 대한 체계적 성장관리를 통해 난개발 제어 및 통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신행정수도의 충청권건설은 지역대학들에 대한 입학수요의 증대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곧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비교적 희망적인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충남소재 대학들을 지역 R&D의 핵심주체로 육성하고 지역산업과 밀착된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역혁신체계(RIS)의 중심축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신행정수도 충청권건설은 기존 경부축상의 가속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고, 서해안개발가능성도 희망적이지만, 충남내륙지역의 경우 역류효과 등으로 인한 공동화가 예상되는 만큼 이들 낙후지역에 대한 개발고 문화관광기능의 강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신행정수도의 충청권 건설은 충남·북과 대전의 적극적 협력 및 제휴가 전제되지 않으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충청권 지역의 개별적인 대응보다

는 공통적인 이해기반을 보유한 충청권 자치단체들이 상호협력 및 보완체계를 형성하는 등 공동발전을 위한 노력이 전제되어야 하고, 현재 대전·충남, 충북으로 이원화되어 활동하고 있는 민간영역에서의 통합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국민홍보위원 충청남도 협의회, 충청권 신행정수도의 성공적 이전을 위한 토론회, 2003.
- 권용우, “수도권 문제와 신행정수도 건설의 방안”, 신행정수도건설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심포지엄, 대한지리학회, 2003.
- 권혁범, 한계레21, 제304호, 한겨레신문사, 2000. 4. 20.
- 기획단, 2000년대의 국토구상, 1979.
- 기획단,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백지계획 : 행정수도광역권개발기본구상, 1978.
- 기획단,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백지계획, 도시기본구조계획, 1978.
- 기획단, 행정수도건설백지계획의 특성, 1979.
- 김의준, “신행정수도건설의 지역경제 효과분석”, 신행정수도건설의 파급효과에 관한 세미나, 국토연구원, 2003.7.
-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 충청권 공동발전방안 연구, 2000.
- 박 경, 신행정수도 충청권 건설과 지역발전, 대전언론문화연구원 세미나 자료, 2003.
- 성태규·송두범·한무호,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의 당위성 연구, 충남발전연구원, 2003.
- 송두범, “신행정수도건설과 충청권의 대응전략”, 국가균형발전과 신행정수도 건설의 과제, 한서대학교·충남발전협의회·한국비교정부학회 정책세미나 자료, 2003.
-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 외국의 행정수도 이전사례, 정책자료 2003-1, 2003.5.
- 신행정수도연구단, 신행정수도이전대상 기관설정 공개세미나, 2003.
- 안정근, 신행정수도 개발방향, 주택도시, 제76호, 주택도시연구원, 2003.
- 이동수, 행정수도이전에 따른 경제적 효과분석, 한국행정학회2003년 춘계학술세미나, 한국행정학회, 2003.
- 전라북도·전라북도의회, 행정수도이전과 신국토관리전략 수립에 따른 전북이 대응전략, 2003.5.
- 전명진·허재완,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인구 및 고용파급효과”, 신행정수도 건설의 파급효과에 관한 세미나, 국토연구원, 2003.
- 정재령, “박정희는 한반도를 거대한 유통산업기지로 만들려 했다”, 월간중앙, 1999.12.
- 충북개발연구원, 신행정수도건설방안과 기대효과, 충북개발연구원·한국동서경제학회·21

세기 지역포럼 공동세미나 자료, 2003.8.

충북개발연구원 · 신행정수도건설범도민협의회, 충청권 신행정수도 건설과 추진과제, 충북  
개발연구원 · 신행정수도건설범도민협의회 공동워크숍 자료, 2003.6.

충북행정학회/대전 · 충남행정학회, 충청권 행정수도 이전의 쟁점과 향후 추진방안, 2003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제1차 공동학술세미나 자료, 2003.3.

충청남도, 제3차 충청남도종합계획(2000~2020), 2000.

충청남도 · 충남발전연구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추진  
방안, 2003.

충청남도의회, 신행정수도의 충청권 건설을 위한 도정 워크숍 자료, 2003.8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1980, 1985, 1990, 1995, 2000.

한국은행대전 · 충남본부, 행정수도 이전논의가 충청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2003.